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238회 임시회〉

2015. 10. 14.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정 원 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기획감사실)

### 3.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

### 4.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 기본방향(안 제3조)

-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전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 보장

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안 제5조)

-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다.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안 제6조)

-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함.

라. 자치분권협의회 기능(안 제7조)

-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등

마.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바. 기타 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

## 5. 관계법령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는 전체 12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안 제1조~제3조에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자치분권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안 제4조~제5조에는 주민의 책무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규정과,  
안 제6조~제7조에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명시,  
안 제8조~제12조에는 의장의 직무, 회의의 운영, 협의회의 예산 지원 근거와 시행규칙 제정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각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의장 또는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는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관계법령

###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7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분권의 기본이념)**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자치행정과)

### 3.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조서」 서식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공적조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4호 서식)

### 5. 관계법령

- 「정부 표창 규정」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공적조서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해당사항이 없으며,

○ 지난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4호 서식】

##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 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 면)

①성 명	(한자) 원명										
②생 년 월 일						③ 군 번 (군인의 경우)					
④성 별											
⑤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⑥주 소											
⑦ 직	업					⑧ 소					속
⑨ 직	위					⑩ 등 급 (직 급, 계 급)			⑪ 근무기간(수공기간)		
⑫ 공적요지(50자내외)						⑬ 공 적 분 야 코 드				—	
⑭ 추 천 훈 격						⑮ 추 천 순 위					
조 사 자											
⑯ 소 속						⑰ 직 위					
⑱ 직 급						⑲ 성 명			㉑		
<p>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p> <p>년 월 일</p> <p>추천관          직위          성명          ㉒</p>											

(뒷 면)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참고 1**      **별지 제4호 서식(현행)**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 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성      명	(한자)												
② 주 민 등 록 번      호 (생년월일)							—	③ 군    번 (군인의 경우)					
④ 주      소													
⑤ 직                      업				⑥ 소                                      속									
⑦ 직                      위				⑧ 등    급 (직    급, 계    급)				⑨ 근무기간(수공기간)					
⑪ 공적요지(50자내외)				⑪ 공    적    분    야    코    드						—			
⑫ 추    천    훈    격					⑬ 추    천    순    위								
조                      사                      자													
⑭ 소                      속					⑮ 직                      위								
⑯ 직                      급					⑰ 성                      명		⑱						
<p>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추천관                      직위                      성명                      ⑲</p>													

(뒷면)

공적사항(육하원칙에 의할 것)

붙임 2)

## 관계법령

### □ 「정부 표창 규정」 제13조

제13조(공적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표창권자(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제외한다)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功績調書)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표창의 표창 대상자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자치행정과)

### 3.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 정비

-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제2호  
: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 “리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으로 개정
- 舊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  
(2008.2.29)  
: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現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관련 조항이 제4조의2로 변경됨

- 서울, 부산 등 타 자치단체의 주민투표 조례를 참고하여 상기와 같이 문구를 개정함

####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항 및 별지 정비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투표법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근거 없음
- 이에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항 및 별지 정비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의 관련조항 문구를 정비하고, 또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한 각 조항을 생년월일로 기재 변경 하였으며,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지난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리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를 “성명·생년월일·주소”로 한다.

제9조 중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주소·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주민투표의 대상)</b>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p> <p>3. ~ 6. (생 략)</p>	<p><b>제4조(주민투표의 대상)</b>-----</p> <p>-----.</p> <p>1. (현행과 같음)</p> <p>2. 리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p> <p>3. ~ 6. (현행과 같음)</p>
<p><b>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b></p> <p>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u>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u>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b>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b></p> <p>① -----</p> <p>----- <u>성명·생년월일·주소</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b>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u>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b>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b>-----</p> <p>-----</p> <p>----- <u>성명·주소·생년월일</u>, -----</p> <p>-----</p> <p>-----</p> <p>-----.</p>
<p><b>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b></p> <p>① (생 략)</p> <p>② 군수는 <u>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문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③ · ④ (생 략)</p>	<p><b>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생년월일</u>-----</p> <p>-----</p> <p>-----</p> <p>-----</p> <p>-----.</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붙임 3)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자치행정과)

### 3. 개정이유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자치사업 지원.

### 4. 주요내용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명시(안 제7조)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달성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주민자치센터  
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 7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명시하여 이를 통해 보조사업의  
효율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지난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 제4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하나와”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에서 규정하는”을 “제5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항에 의해”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0조제5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0조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에 제8항과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운영 평가 및 시상
2.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개최 및 시상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행사 참가 지원
4. 주민자치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5.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추진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0조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의”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내지”를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 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하도록 하기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 자치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p> <p><b>제4조(설치 등)</b> ① 자치센터는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u>당해</u>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u>당해</u>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p> <p><b>제5조(기능)</b> ①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u>각호의 1과</u> 같다. 1. ~ 6. (생 략) ② 제1항의 기능중 <u>당해</u>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u>제2항의</u>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수 있다.</p>	<p><b>제1조(목적)</b> ----- ----- <u>따라</u> ----- ----- ----- ----- -----.</p> <p><b>제2조(용어의 뜻)</b> ----- <u>뜻은</u>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p> <p><b>제4조(설치 등) ①</b> ----- ----- <u>해당</u> ----- ----- -----.</p> <p>② ----- <u>해당</u> ----- -----.</p> <p><b>제5조(기능) ①</b> ----- ----- <u>각 호의 어느 하나와</u> ----- 1. ~ 6. (현행과 같음) ② ----- <u>해당</u> ----- ----- -----.</p> <p>③ <u>제2항에도</u> ----- ----- -----.</p>

현행	개정안
<p><b>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b> ①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u>당해</u> 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읍면사무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u>기타</u>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b>제7조(운영)</b> ① ~ ② (생략)</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p> <p>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당해</u>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b>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b> ① ----- ----- 제5조의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해당</u> ----- ----- ----- -----.</p> <p>④ ----- ----- <u>그밖에</u> ----- ----- -----.</p> <p><b>제7조(운영)</b>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제2항에 따라 ----- ----- ----- ----- 제10조제5항에 따라 ----- ----- -----.</p> <p>④ ----- <u>해당</u> ----- ----- ----- -----.</p> <p>⑤ ----- ----- -----, 제10조에 따라 ----- ----- -----.</p>

현행	개정안
<p>⑥ ~ ⑦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p>⑧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⑨ 제8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치센터 운영 평가 및 시상</li> <li>2.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개최 및 시상</li> <li>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행사 참가 지원</li> <li>4. 주민자치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li> <li>5.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추진</li> <li>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10조(사용료 등) ① ~ ④ (생략)</p> <p>⑤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p> <p>⑥ (생략)</p>	<p>제10조(사용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따라 ----- -----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이용 등) ① ~ ② (생략)</p> <p>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④ ~ ⑤ (생략)</p>	<p>제11조(이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제10조의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p>1. ~ 4. (생략)</p>	<p>제16조(기능) ① ----- -----.</p> <p>1. ~ 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5. <u>기타</u>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제1항의 <u>규정에</u>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p> <p>③ 위원회는 제21조에 <u>의한</u>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17조(구성 등) ① (생략)</b></p> <p>② 읍·면장은 <u>당해</u> 읍·면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p>1. <u>당해</u>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u>기타</u>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p> <p>2. (생략)</p> <p>③ ~ ④ (생략)</p> <p>⑤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u>당해</u> 읍·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p> <p>⑥ ~ ⑦ (생략)</p> <p><b>제20조(해촉) ①</b> 읍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있으며, 이 경우 제4호 <u>내지</u>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5. <u>그밖에</u> ----- -----</p> <p>② 제1항에도 ----- ----- -----.</p> <p>③ ----- <u>따른</u> ----- ----- ----- -----.</p> <p><b>제17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b></p> <p>② ----- <u>해당</u> ----- ----- ----- ----- ----- -----.</p> <p>1. <u>해당</u> ----- ----- ----- <u>그밖에</u> ----- -----</p> <p>2.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해당</u> ----- ----- ----- -----.</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p><b>제20조(해촉) ①</b> -----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 <u>및</u> ----- -----.</p>

현행	개정안
<p>1. <u>당해</u> 읍면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p> <p>2. ~ 4. (생략)</p> <p>5. <u>기타</u>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② 제1항에 <u>의한</u>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본다.</p> <p><b>제21조(회의) ① (생략)</b></p> <p>② 제1항에 <u>의한</u>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p> <p>③ ~ ⑤ (생략)</p>	<p>1. <u>해당</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3. <u>그밖에</u> ----- ----- -----</p> <p>② ----- <u>따른</u> ----- ----- -----.</p> <p><b>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b></p> <p>② ----- <u>따른</u>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붙임 3)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8조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회계과)

### 3.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3017호, 시행 2015 .7. 21.)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6408호, 시행 2015 7. 21)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인용조문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 공유재산심의회의 신규 구성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제출 시기 명확화(안 제12조)

- 다음연도 예산을 군의회에서 의결하기 전 → 회계연도 시작 40일전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용어 수정(안 제22조)

라.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수익계약 매각 대상 삭제(안 제40조)

-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인 공유지분권자에게 수익 매각  
→ 삭제(상위법에 반영)

##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6조,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8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당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신규로 구성·운영을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를 “다음연도 예산을 군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전”으로 변경하여 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법 제27조 제4항”에서 “법 제27조제6항”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수정함과  
안 제40조에서는 공유지분권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인 공유지분권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토록 한 조항을 삭제  
를 하였으며,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지난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의 2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 요건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학과에 재직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⑤ 위원은 달성군 소속 공무원과 제3항 및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의 방법대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⑩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⑪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⑫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은 자기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⑬ 심의회의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

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27조제4항”을 각각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표시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공유재산심의회) 법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u></p>	<p><u>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u></p> <p><u>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격 요건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학과에 재직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u></p> <p><u>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u></p> <p><u>⑤ 위원은 달성군 소속 공무원과 제3항 및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u></p> <p><u>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u></p>

현행	개정안
	<p>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⑦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⑧ 심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의 방법대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⑩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⑪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li> <li>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li> <li>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li> <li>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li> </ol>



현행	개정안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생략)</p> <p>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p> <p>① ~ ③ (생략)</p> <p>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p> <p>⑫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은 자기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p> <p>⑬ 심의회의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제27조제6항- ----- ----- ----- -----.</p>

현행	개정안
<p>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⑥ (생략)</p> <p>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p> <p>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3천제곱미터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p> <p>6. ~ 7. (생략)</p>	<p>⑤ ----- ----- 제27조제6항 ----- ----- -----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p> <p>----- ----- -----.</p> <p>1. ~ 4.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6. ~ 7. (현행과 같음)</p>

붙임 3)

## 관계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08.12.26.]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0.]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08.12.26.]

[제목개정 2015.1.20.]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0.6.28., 2010.8.4., 2012.4.10., 2013.3.23., 2014.7.7., 2014.11.19., 2015.2.16., 2015.7.20.>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

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마.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라. 그 밖의 비영리법인

22. 제21호에 따른 도서·벽지 외의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 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

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0.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31.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2.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3.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한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익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5.7.20.>

[전문개정 2009.4.24.]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정보통신과)

### 3. 개정이유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우리군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함.

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 요청과 전자정부법 제65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지원에 대하여 군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 4. 주요내용

가. 정보화기본계획 수립방법 변경(안 제4조)

나.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자문 기능으로 변경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정보화마을에 대한 군 재정지원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 5.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 「전자정부법」 제65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23조제3항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우리군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 요청과 전자정부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지원에 대하여 군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에서 정보화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최근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화 환경에는 맞지 않아 우리  
군의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수립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자문기능으로 변경하여 군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추진위원의  
자문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고,

안 제8조의2 신설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지원 법령에 따라  
정보화마을지원사업에 대한 군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지난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년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달성군의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성별구성에 있어 한쪽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5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이버 또는 서면에 의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심의한다.”를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정보화 추진 지원)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제4항 중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에 관한”을 “산정기준, 감면 등에 관해서는”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4조(기본계획의 수립)</b></p> <p>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5년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 ④ (생략)</p> <p><b>제5조(위원회의 구성)</b></p> <p>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u>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u>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u>성별구성에 있어 한쪽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p> <p>③ ~ ⑤ (생략)</p> <p>⑥ <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⑦ (생략)</p> <p><b>제6조(위원회의 기능)</b>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u>사항을 심의한다.</u></p> <p>1. ~ 4. (생략)</p>	<p><b>제4조(기본계획의 수립)</b></p> <p>① ----- ----- <u>달성군의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b>제5조(위원회의 구성)</b></p> <p>① ----- <u>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u> ----- -----.</p> <p>②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u>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u>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이버 또는 서면에 의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u></p> <p>⑦ (현행과 같음)</p> <p><b>제6조(위원회의 기능)</b> ----- ----- <u>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붙임 3)

## 관계법령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2015.6.22.>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 □ 「전자정부법」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
3.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
4.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통합관리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5.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정보통신과)

### 3. 개정이유

가. 행정자치부에서 국무조정실의 「2015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지침」에 의거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정비 추진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적을 제한하거나 그 용도를 제한하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정비

### 4. 주요내용

○ 정보공개의 원칙 중 청구인이 공개 받은 행정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 삭제(안 제2조)

### 5.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가 국무조정실의 「2015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지침」에 따라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발굴 및 정비함에 발맞추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적을 제한하거나 그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이 되어 동 조례 제2조 정보공개의 원칙 중 ‘청구인이 공개 받은 행정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지난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생 략) ② <u>청구인은 공개 받은 행정정보를 청</u> <u>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u> <u>아니 된다.</u>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붙임 3)

## 관계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사회복지과)

### 3. 개정이유

-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이용료 및 환불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나. 사용료 납입 및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5.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이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들과의 분쟁소지를 해소하는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중 별표1에는 수영장 시설이용료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사물함 이용요금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안 제13조에는 이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지난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  
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교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5. 물품판매 등 순수 영리목적의 행사

제10조제2항 중 “제6호의 규정에”를 “제6호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1”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11조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료의”를 “수영, 헬스에 한하여 이용료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 “그 밖에 군수가”를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국가나 시 또는 군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의 비영리목적의 공연 또는 전시
2. 순수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따른 공연 또는 전시

제13조제1항 본문 중 “사용일 전날까지”를 “사용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제10조제1항제6호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100%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100% 반환
3. 사용예정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④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2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제17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단서 부분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무료시설 이용”을 “시설의 무료이용”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재위탁”을 각각 “재계약”으로 한다.

제23조제3호 중 “수탁자는”을 “수탁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탁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및 수탁 받은 재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제1항 중 “그 밖에 재산을 지체 없이”를 “그 밖의 재산을 원상 회복하여 지체 없이”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여성문화복지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제11조 관련)

## 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 : 원)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일 입장 요금			비고
수영장	이용요금 (월)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이용요금 (월)	50,000														
사물함	이용요금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000원														
체형분석	이용요금	1회 5,500원														

※ 장기등록(3개월 이상) 이용회원에 대하여는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이용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2) 문화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구분	이용료	비고
문화강좌 이용료	60,000원 이하	· 주1회 한달 기준
기타	·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 ·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 교재 및 재료비 별도	

## 3) 시설사용료(대관시설)

(단위 : 원)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강당		오전	30,000	
		오후	50,000	
		야간	70,000	
회의실 및 강의실		1회(2시간)	10,000	
부속설비	피아노	1회	30,000	
	Beam Project	1회	20,000	
	조명	1회	25,000	
	냉·난방기	1회	80,000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 가. 오전 - 09:00 ~ 12:00
- 나. 오후 - 13:00 ~ 17:00
- 다. 야간 - 18:00 ~ 22:00
-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5)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별표 2]

## 여성문화복지센터 이용료 반환기준

## 1. 이용료 반환

(수영장, 헬스장)

반 환 기 준	
개시일 이전	10% 반환 수수료
개시일 이후	10%반환수수료, 반환신청일 당일까지의 요금 일할계산 ※반환금액=이용료- {반환수수료+(이용료/30)×이용일수} ,반환기준일은 매월1일로 함

(문화강좌 등)

반 환 기 준
<p>1. 수강기간 개시 전: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반환</p> <p>2. 강습개시 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습기간이 1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강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반환</li> <li>· 총강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반환</li> <li>· 총강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미반환</li> </ul> </li> <li>- 강습기간이 1월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강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li> </ul> </li> </ul> <p>※ 정규강좌는 3개월(12회)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법정공휴일 등의 사유로 수업횟수는 변동될 수 있다.</p>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붙임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9조(시설사용허가의 제한)</b> 군수는 사용 목적이나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p> <p>1. ~ 3.(생략)</p> <p>4.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u></p> <p><u>&lt;신설&gt;</u></p> <p><b>제10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b></p> <p>① (생략)</p> <p>② 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나 사용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b>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b> ① 군수는 센터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범위는 <u>별표</u>와 같다.</p> <p>② (생략)</p> <p><b>제12조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b> ① <u>제11조제1항의 규정에</u>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② <u>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u></p>	<p><b>제9조(시설사용허가의 제한)</b>-----</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종교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u></p> <p>5. <u>물품판매 등 순수 영리목적의 행사</u></p> <p><b>제10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6호에</u> -----</p> <p>-----.</p> <p><b>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b> -----</p> <p>-----</p> <p>----- <u>별표1</u> -----.</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12조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b> ① <u>제11조제1항에도</u> -----</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u></p> <p>1. <u>국가나 시 또는 군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의 비영리목적의 공연 또는 전시</u></p> <p>2. <u>순수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따른 공연 또는 전시</u></p>

현행	개정안
<p>③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이용료의</u>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9.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p> <p>④ (생략)</p> <p><b>제13조 (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b></p> <p>①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u>사용일 전날까지</u>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2회에 걸쳐 행사 전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u>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p>1. 제10조제1항제6호에 의한 경우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때</p> <p>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p> <p>3. <u>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허가 등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u></p> <p>4. <u>그 밖에 군수가 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u></p> <p>④ <u>이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u></p>	<p>③ ----- ----- <u>수영, 헬스에 한하여 이용료의</u>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u> -----</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13조 (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b></p> <p>① ----- ----- <u>사용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u></p> <p>1. 제10조제1항제6호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100% 반환</p> <p>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100% 반환</p> <p>3. <u>사용예정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u></p> <p>4. <u>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u></p> <p>④ <u>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2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u></p>



현행	개정안
<p><b>제17조(홍보물 게첨) ① (생략)</b></p> <p>② 사용자는 제1항에 <u>의한</u>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p> <p><b>제19조(변상 및 배상책임)</b></p> <p>①·② (생략)</p> <p>③ 사용자의 임의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관람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4항에 <u>의해</u> 징수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p> <p>④ (생략)</p> <p><b>제20조(이용신청 및 입장의 제한) ①</b>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무료시설 이용</u>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④ (생략)</p> <p><b>제21조(위탁운영) ①</b>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u>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u>」(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u>의한다</u>.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u>재위탁</u> 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24조의 위탁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u>재(再)위탁</u> 할 수 없다.</p>	<p><b>제17조(홍보물 게첨) ① (현행과 같음)</b></p> <p>② ----- <u>따른</u> ----- ----- -----.</p> <p><b>제19조(변상 및 배상책임)</b></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 <u>따라</u> ----- -----.</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20조(이용신청 및 입장의 제한) ①</b> ----- ----- <u>시설의 무료 이용</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b>제21조(위탁운영) ①</b> ----- ----- 「<u>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u>」----- <u>따른다</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재계약</u> ----- ----- ----- -----.</p> <p>④ ----- ----- <u>재계약</u> ----- -----.</p>

붙임 3)

## 관계법령

###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참고 2** [별표][현행]**여성문화복지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제11조 관련)****1) 시설이용료(수영장·헬스장)**

(단위 : 원)

구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 이하)			아쿠아로빅		1일 입장 요금			비고
수영장	이용 요금 (월)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 초등	부가가치 세금액 (10%)은 별도 가산함
		70,000	49,000	35,000	63,000	45,000	35,000	58,000	42,000	30,000	49,000	35,000	3,000	2,000	1,500	
헬스장	이용 요금 (월)	50,000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2) 시설사용료(대관시설)**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강 당		오 전	30,000	
		오 후	50,000	
		야 간	70,000	
회의실 및 강의실		1회(2시간)	10,000	
부 속 설 비	피 아 노	1회	30,000	
	Beam Project	1회	20,000	
	조 명	1회	25,000	
	냉·난 방 기	1회	80,000	

※주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시간 구분

- 가. 오전 - 09:00 ~ 12:00
- 나. 오후 - 13:00 ~ 17:00
- 다. 야간 - 18:00 ~ 22:00
- 라. 1일 - 09:00 ~ 22:00

3)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일반인에 대하여는 당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4)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5) 초과 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사회복지과)

### 3. 개정이유

- 공립어린이집인 강림어린이집이 신설됨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신설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추가(안 별표)

### 5.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립어린이집인 강림어린이집이 신설됨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이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1】 과 같음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매곡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14길 11, 203동 1층(주공아파트)
죽곡휴먼시아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1길 6, 106동 1층(죽곡휴먼시아1단지아파트)
서재휴먼시아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14길 2, 108동 1층(서재휴먼시아아파트)
하빈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404
옥포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신당4길 25
구지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중앙3길 12
강림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돌미로 51(천년나무2단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관계법령

###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희망지원과)

### 3. 개정이유

-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주간에 실시되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현행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자 및 단체가 자원봉사활동 시 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10조)
- 나. 자원봉사주간에 실시되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직접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 5.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자원봉사관련 사업  
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자원봉사자 및 단체가 자원봉사활동 시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제2항에서는 자원봉사주간에 실시되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함이며,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지난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를 “(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을 “센터는”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군수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0조(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b></p> <p>①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 수요자 연결 등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을 하여야 한다.</p>	<p><b>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b></p> <p>&lt;삭 제&gt;</p> <p>② 센터는 ----- ----- ----- -----.</p>
<p><b>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b></p> <p>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b>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 ----- ----- 실시할 수 있으며, 군수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붙임 3)

## 관계법령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희망지원과)
3. 제정이유

○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의거 위기상황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명시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 4.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5.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그 동안, 긴급복지를 지원 할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으나,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은 자체예산(국비 80%, 시, 군비 각 10%)을 반영하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지난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위임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달성군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구 구성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법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신고 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기상황의 발굴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사용료의 체납으로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등이 된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지 3개월 내인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인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 결정되지 않은 지 3개월 내인 경우
6. 가구원(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8.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소득활동이 미미하게 된 경우
  9. 아동, 장애인 또는 노인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임 또는 유기된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12. 사(私)채를 제외한 과다채무의 채권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전부터 상환독촉을 받거나 3개월 이상 그 채무의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
  13.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자로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가 제1항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③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사회보장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 비 용 추 계 서

### 1. 사업개요

- 사용기간 : 연중
- 주요내용
  - 긴급복지지원법 및 달성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달성군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을 위한 비용 발생

### 3. 관련조문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의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5년으로 하고 연도별 예산 추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변동율(1.07%)을 반영한다.
- 소요 예산액 : 540,000천원(국·시비 486,000천원, 군비 54,000천원)/2015년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632가구

○ 긴급복지 지원기준 (상위법령) 등

-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기준 : 소득 (최저생계비기준 185%이내), 재산 13,500만원, 금융500만원 이하
- 지원의 종류 및 지원액 : 생계비(4인기준 110만원), 의료비(300만원이내)  
주거비(3~4인기준 60만원), 장제비(75만원) 등
- 지원횟수 : 단기지원 원칙으로 3개월 (예외적으로 연장가능)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긴급복지지원	540,000	545,778	551,618	557,520	563,486

※ 국비80%, 시비10%, 군비10%

다. 재원조달방안

- 중앙 및 대구광역시보조금 사업예산 협의
- 보조사업 내시 (국비80%, 시비10%, 군비10%)에 따라 군비  
매칭비용 확보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희망지원과 사회복지서기보 최지원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540,000	545,778	551,618	557,520	563,486	2,758,402
긴급복지지원		540,000	545,778	551,618	557,520	563,486	2,758,402
재원 조달		540,000	545,778	551,618	557,520	563,486	2,758,402
의존 재원	소 계	486,000	491,200	496,456	501,768	507,137	2,482,561
	보조금	486,000	491,200	496,456	501,768	507,137	2,482,561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4,000	54,578	55,162	55,752	56,349	275,841
	군비	54,000	54,578	55,162	55,752	56,349	275,841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붙임 2)

## 관계법령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희망지원과)

### 3.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35호, '14. 12. 30. 공포, '15. 7. 1. 시행)의 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 현행 :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개정 : 대구광역시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나. 사회보장 명칭변경

- 지역사회복지 → 지역사회보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다.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추가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 확대(30인 이내 → 40인 이내)
- 각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함

### 5.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그 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구성·운영해 왔으나 최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협의체 조례를 개정함과 읍·면 복지협의체 구성기준을 신설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및 맞춤형 보호체계 구축으로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이며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과, 안 제3조에 협의체의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각 협의체의 구성인원을 3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확대하고 안 제20조에는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은 자체예산(시비20%,군비80%)반영,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지난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3. “사회보장 대상자”란 지역의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의 증진 또는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군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군수가 임명하는 군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 공무원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각 1명으로 하며,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군 공무원
- ③ 군의 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담당·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된다.
-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전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전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의 협

## 의·조정

4.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와 관련된 모니터링
6.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7. 그 밖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지역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 및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군 공무원은 관련 실무분과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 및 총무는 각 실무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읍·면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상시 발굴 체계 구축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각 읍·면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협의체는 읍·면별로 읍·면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군수가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수행 및 서비스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읍·면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협의체는 관할 읍·면장 1명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읍·면장을 제외한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읍·면협의체의 위원들이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후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를 말한다, 이하 본조 및 다른 조에서도 같다)의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은 해당 협의체와 실무분과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과 실무분과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 위원 중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 위원의 위촉권자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3조(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보조와 지원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

③ 군수는 군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는 재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

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그 밖의 참석자명단
3. 심의·회의사항
4. 심의·회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군의 협의체업무 담당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이 각 협의체에 출석·의견진술·자료의 제출·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 및 군수의 사전승인을 거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에서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비 용 추 계 서

### 1. 사업개요

- 사용기간 : 연중
-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함
  -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함
  -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자원발굴과 연계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2. 비용 발생 요인

- 지역사회보장계획심의회 등 위원회 회의개최 수당
- 협의체 운영비 및 직원(상근간사) 급여
- 민간행사사업보조(행복복지한마당) 등

### 3. 관련조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5항
-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19조, 제20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의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5년으로 하고 연도별 예산 추계는 간사(1명) 호봉승급분 반영 등 최소 증가분 반영
-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개최 : 분기1회 이상
- 소요 예산액 : 81,305천원(시비 16,261천원, 군비 65,044천원)/2015년

#####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협의체운영·지원	81,305	81,392	81,481	81,571	81,662

※ 시비20%(상근간사 인건비), 군비80%

##### 다. 재원조달방안

- 중앙 및 대구광역시보조금 사업예산 협의
- 보조사업 내시 (시비20%, 군비80%)에 따라 군비 매칭비용 확보

####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6. 작성자 : 희망지원과 사회복지주사보 이미지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81,305	81,392	81,481	81,571	81,662	407,411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81,305	81,392	81,481	81,571	81,662	407,411
재원 조달		81,305	81,392	81,481	81,571	81,662	407,411
의존 재원	소 계	16,261	16,278	16,296	16,314	16,332	81,481
	보조금	16,261	16,278	16,296	16,314	16,332	81,481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5,044	65,114	65,185	65,257	65,330	325,930
	군비	65,044	65,114	65,185	65,257	65,330	325,930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붙임 2)

## 관계법령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교통과)

### 3. 제정이유

- 가. 달성군의 인구 및 통행차량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책무 및 추진체계를 종합적·계획적으로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 나. 「지방재정법」 개정(“14.11.29) 및 시행(“16.1.1)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의 기준 및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사고”의 의미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교통안전에 관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4조)
- 라.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름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바.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7~9조)
- 사. 교통안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5.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달성군의 인구와 통행차량의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미연의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교통안전 책무 및 추진체계를 종합적·계획적으로 규정을 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및 시행(2016. 1. 1)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기준 및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 규정과, 안 제6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제8조에는 교통안전 시책추진을 위해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 제9조에는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지도 및 홍보활동에 관한 규정, 제10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을 하였으며,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지난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 등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협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협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달성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군이 제작한 교통안전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한 교육
3. 군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이용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교육 등 그 밖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통지도 등)** ① 군수는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중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원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원하거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관계법령

###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공원녹지과)

### 3. 제정이유

- 사문진 역사공원 등 사문진 일원 방문객들에게 수려한 자연환경에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사문진피크닉장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 4. 주요내용

가. 피크닉장의 위탁운영 등 (안 제5조 ~ 제8조)

나. 시설물 사용시간, 사용료 및 면제·반환 등 (안 제9조 ~ 제13조)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문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울창한 백년숲일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사문진피크닉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8조에는 피크닉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13조에는 시설물(평상) 사용료 및 면제·반환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시설물(평상) 사용료는 1일 9시간 기준으로 대형평상(가로4m 세로6m)은 2만원, 소형평상(가로3.3m 세로 4.6m)은 1만5천원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지난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피크닉장(이하 “피크닉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330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피크닉장 이용객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피크닉장 내에 설치한 평상, 장비 등의 물건과 식재하거나 생육 중인 수목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허가를 받고 피크닉장 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피크닉장 내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제4조(피크닉장의 관리·운영 권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크닉장을 관리·운영할 권한을 가진다.

**제5조(관리·운영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피크닉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탁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한 경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이나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해지 또는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위탁사무 처리에 사용하던 시설물을 원상으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나 사용자가 시설물을 관리·운영 또는 사용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되, 그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부주의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피크닉장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1차적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시

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별표 1에 따르며,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요금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상태에서 임의로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날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설물 사용 예약)** ① 시설물 사용 예약은 사용자가 예약을 한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입금 또는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관리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입금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시설물 사용 예약순위는 신청순위에 따르되, 필요시 대외적으로 고지 후 추첨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피크닉장과 시설물의 사용 전까지 사문진 피크닉장 사용료 면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피크닉장과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각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2. 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크닉장과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크닉장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허가 없이 취사나 야영(숙박)을 하는 경우
4. 피크닉장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5.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6. 피크닉장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안전 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그 밖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72 -

## [별표 1]

## 사문진피크닉장 사용시간 및 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피크닉장 평상		비 고
사용시간	09:00 ~ 18:00		○ 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 (계절별 일몰시간, 기상악화, 화재예방 등)
사 용 료	소형평상 (3.3m × 4.6m)	대형평상 (4.0m × 6.0m)	○ 성수기·비수기 구분 없이 1면 기준으로 징수
	15,000원	20,000원	
비 고	① 피크닉장 사용시간은 9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계절별 일몰시 간 등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야간(일몰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별표 2]

## 시설물 사용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1.사용자가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불</li> <li>○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 환불</li> <li>○ 사용예정일 1일전에 예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80퍼센트 환불</li> <li>○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미 사용한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환불</li> </ul>
2.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예정일 5일전에 통보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불</li> <li>○ 사용예정일 2일전에 통보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li> <li>○ 사용예정일 1일전에 통보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li> <li>○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환불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li> </ul>
3.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li> </ul>

붙임 2)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정책사업과)

### 3. 제정이유

- 종교인 상호간 상생과 화합을 바탕으로 달성군 지역발전에 기여하기위해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근거 및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은 종교인 상호간 상생과 화합을 바탕으로 달성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달성군 지역 내의 불교, 기독교 및 천주교 각 종단 또는 그 신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회장 3인 이하, 부회장 3인 이하, 감사 3인 이하, 간사(달성군 공무원 각 종단 회장)로 구성 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함(안 제2조)
- 다.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각 종단 또는 종교인의 행사, 사회 교육사업, 사회복지 및 각종 봉사사업, 인권신장 및 소외계층 보호사업, 그 밖에 군수가 달성군의 발전과 달성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라. 협의회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4조)
- 마. 군수는 각종 지원을 하는 경우 협의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종교인 상호간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달성군의 지역발전과 달성 군민의 안녕에 기여하기 위하여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근거 및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이며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원 대상인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에 대한 정의 및 임원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회회의 활동이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명시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개선권고)

- 5조 3항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시 지원금을 환수하는데 그칠 경우, 반복적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부담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부패 발생 우려가 있어 제한규정(○년간 지원사업 선정에서 제외한다.)을 둘 것을 권고 받았으나, 지원 자체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은 조례 입법 취지에 반하는 사항이므로 추가로 제한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권고사항을 미수용함.

○ 지난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교인 상호간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달성군의 발전과 달성군민의 안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달성군 지역 내의 불교, 기독교 및 천주교 각 종단 또는 그 신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 된 단체를 말한다.

1. 회장 : 3인 이하(공동의장)
2. 부회장 : 3인 이하
3. 감사 : 3인 이하
4. 간사 : 달성군 공무원 각 종단 회장

**제3조(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의 발전과 달성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달성군의 발전과 달성군민의 안녕을 위한 목적으로 협의회가 주최한 종단 또는 종교인의 행사
2. 사회 교육사업
3. 사회복지 및 각종 봉사사업
4. 인권신장 및 소외계층 보호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달성군의 발전과 달성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협의회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첨부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한 경우 협의회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2)

##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정책사업과)

### 3.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보조 사업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준 도입

### 4. 주요내용

가. 장 구분 신설 : 총칙 등 3개장  
나. 총칙(안 제1조 ~ 제4조) :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포괄적 규정 삭제 및 보조대상 사업유형 명시(6종 →12종)  
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안 제5조 ~ 제10조) : 명칭변경, 사문화된 부위원장 규정 삭제,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원칙 도입  
라.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수행(안 제11조 ~ 제15조) :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제출할 서류에 사업계획변경신청서 명시

###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지방보조사업은 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 취지에 맞게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준을 명시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나열식 구조에서 ‘총칙’ 등 3개 장으로 장 구분 신설과  
안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가 기존 6종에서  
현재 시행중인 보조대상 사업의 유형에 맞추어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등 12가지 유형으로 바뀌었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양성평등을  
지향하였으며,

-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은 자체예산(국,시비 일부보조) 반영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지난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지원 등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2. 관내 문화유적 답사 등 체험학습 지원사업
3. 학교적응력 또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지원사업
4. 올곧은 인성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사업
5.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심화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6. 지역주민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
7.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사업(관내 통학에 한함)
8. 급식시설, 교육 정보화 등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9. 학교 운동장 또는 강당을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는 사업

10. 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비 지원사업
11. 자율형고등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12.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군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고등학교 및 기숙형고등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위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장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제5조(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군수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 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정책사업단장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관할 교육청 교육감(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4. 그 밖에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③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

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 정책사업과장이 된다.

⑥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 정책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관련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교육경비 보조사업 수행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청 교육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교육청과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시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제2항의 통지 시 부가한 조건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각급학교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계획변경신청서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각급학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비 용 추 계 서

### 1.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주요내용 : 학교교육 경비지원 각종 사업
- ※ “비용 추계결과” 각 항목 참조

### 2. 비용발생 요인 : 사업비(보조금)

### 3. 관련조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제6항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학교 수요를 2015년 수준으로 봄

나. 추계 결과 : 합계 연 3,000백만원 정도

- 방과 후 학교지원 사업 : 연 500백만원 정도
- 관내 문화유적 답사 등 체험학습 지원사업 : 연 60백만원 정도
- 학교적응력 또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지원사업 : 연 40백만원 정도
- 올곧은 인성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사업 : 연 50백만원 정도
-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심화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 연 700백만원 정도
- 지역주민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 : 연 100백만원 정도
-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사업 : 연 120백만원 정도
- 급식시설, 교육 정보화 등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 연 300백만원 정도
- 학교 운동장 또는 강당을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생활체육시설

로 조성하는 사업 : 연 410백만원 정도

○ 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비 지원사업 : 연 400백만원 정도

○ 자율형고등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 연 70백만원 정도

○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사업 : 연 250백만원 정도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국·시비 일부보조)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지

6. 작성자 : 정책사업과 교육정책팀 김준성

[별 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교육경비 보조사업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재원 조달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군비		2,620,000	2,620,000	2,620,000	2,620,000	2,620,000	13,100,00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붙임 2)

##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정책사업과)

### 3. 제정이유

가.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영어교육 진흥사업의 시행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자 함.

나. 영어교육 진흥사업의 유형을 명시하고 전문기관에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사업분야(안 제3조)

다. 관리·운영의 위탁 등(안 제4조 ~ 제6조)

라. 원어민 영어교실의 운영 보조(안 제7조 ~ 제8조)

마. 수탁자의 운영 지원 범위(안 제9조 ~ 제11조)

바. 위탁사무의 범위(안 제12조 ~ 제14조)

### 5.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따라 보조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영어교육 진흥 사업의 명시와  
안 제4조에서는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의 명시와  
안 제7조~11조에서는 위탁의 경우 지급될 보조금의 범위를 수강료 또는 강사료에 한정하여 사업수행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은 자체예산(시비 일부보조) 반영

○ 성별/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부패영향평가 : 의견있음(개선권고)

-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없으면 비공개 모집을 통한 부패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충분히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유연성이 보장되므로 권고사항 미수용
- 재위탁에 대한 제한이 미흡하여 재위탁 횟수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수용하여 재위탁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

○ 지난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1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하는 영어교육사업의 실시·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초·중·고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3. “군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원어민 영어교실”이란 학생 또는 군민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어강좌를 말한다.
5. “영어마을 체험학습”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 교육시설 내에서 영어권 문화 및 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상영어 학습”이란 학생 또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영어학습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실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의 영어실력 강화를 위한 학교별 원어민 영어교실 개설·운영 사업
2. 군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실 개설·운영사업
3. 영어마을 체험학습 등 단기 집중캠프 개설·운영사업

#### 4.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영어 학습프로그램 개설·운영 사업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탁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2장 원어민 영어교실의 운영 보조

**제7조(원어민 영어교실 운영보조)** ① 군수는 제1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학생 또는 군민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어민 강사료
2. 한국인 보조강사료

**제8조(조례의 준용)** 제7조의 보조금 지급신청, 교부결정 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수탁자의 운영 지원 범위

**제9조(원어민 영어교실)**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원어민 영어교실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원어민 강사료
2. 한국인 보조강사료

**제10조(영어마을 체험학습)**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영어마을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위탁교육비에 한한다.

**제11조(화상영어 학습)**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화상영어 학습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수강료에 한한다.

### 제4장 위탁사무의 범위

**제12조(원어민 영어교실)**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원어민 영어교실과 관련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원어민강사 파견 및 관리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13조(영어마을 체험학습)**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영어마을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학교별 연간 학습일정 수립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14조(화상영어 학습)**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화상영어 학습과 관련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2. 수강생 관리 및 설문조사

## 제5장 그 밖의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진흥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주요내용 : 영어관련 교육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 영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영어교육 시행방법은 유형별로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
  - 위탁시행 시 예산지원의 범위를 정함

2. 비용발생 요인

- 원어민 영어교실, 영어마을 체험학습, 화상영어 학습센터 수강료

3. 관련조문 :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항, 제2항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원어민 영어교실, 영어마을 체험학습,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 비용 경비 산정

나. 추계 결과 : 합계 연 2,696백만원 정도

- 원어민 영어교실 : 2,696,000,000원
- 영어마을 체험학습 : 630,000,000원
- 화상영어 학습센터 : 125,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시비 일부보조)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지

6. 작성자 : 정책사업과 교육정책팀 김준성



[별 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2,696,000	2,696,000	2,696,000	2,696,000	2,696,000	13,480,000
국제화 외국어교육 강화사업		2,696,000	2,696,000	2,696,000	2,696,000	2,696,000	13,480,000
재원 조달		2,696,000	2,696,000	2,696,000	2,696,000	2,696,000	13,48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비		68,540	68,540	68,540	68,540	68,540	342,700
군비		2,627,460	2,627,460	2,627,460	2,627,460	2,627,460	13,137,30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붙임 2)

## 관계법령

###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경제과)

### 3. 개정이유

-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내용의 전부를 관련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 질서 유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시장사용료 보증금 납부규정 삭제(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분야 개선사항)  
 나. 공설시장, 상설시장, 정기시장 등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  
 (안 제2조)  
 다. 공설시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구체화(안 제4조)  
 라. 공설시장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용자관리대장 신설  
 마. 사용허가 취소·해지와 사용제한 규정(안 제6조)  
 바. 사용권의 양도금지 구체화(안 제8조)  
 사. 사용료 조정(안 제9조)

구 분	현 행	개 정
상설 시장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5 건물: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20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35 건물: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25

- 아. 사용료 감면 신설 및 반환 규정 개정(안 제10조 ~ 안 제11조)
- 자. 사용자의 관리의무 강화(안 제14조)
- 차.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신설(안 제17조)
- 카. 판매제한 신설(안 제20조)
- 타. 운영·관리의 위탁 및 취소(안 제21조 ~ 안 제22조) : 취소조항 신설
- 파. 연체료·변상금 징수 신설(안 제23조 ~ 안 제24조)
- 하. 상인회(안 제25조) : 상인회 관장업무 신설

## 5.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65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 질서유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및 상위법에 맞추어서 시장사용료  
보증금 납부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공설시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의 구체화  
안 제5조~6조에는 사용자관리대장 신설, 사용허가 취소·해지와  
안 제8조~20조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료 요율조정과 감면,  
사용료 반환, 사용자의 관리의무 강화, 판매제한 물품 명시  
안 제21조~25조에는 운영·관리의 위탁 및 위탁 취소, 연체료와  
변상금 징수, 상인회 관장업무를 명시하였으며,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지난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을 말하며,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판매대”란 시장건물 내부의 정해진 구역에서 상품 및 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 판매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시장부지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진열,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좌판을 말한다.
9.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 장옥, 판매대, 노점,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이 있는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장의 대표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해당 건축 및 시설물의 완공일까지로 한다.

③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시장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제5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고 수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설하지 않을 경우

⑤ 시장 및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은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시장 및 임시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사정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는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1. 점포운영계획서 1부
2. 성실히행서약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정관 1부(단체에 한함)
5.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명서, 설계도면
6. 그 밖에 관계사항을 증빙할 서류

②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사용자의 일치여부 등 제2항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 상의 항목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해지와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을 허가한 시장재산을 국가나 달성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해당 시장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를 받은 시장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사용 허가를 받은 시장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7조(청문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해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수수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피상속인의 사용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의 계속 사용자의 경우에는 시장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의 징수는 1년 단위로 하며, 사용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점포, 장옥, 판매대, 노점이 2개 이상의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해당 시장 내에 2개 이상의 점포, 장옥, 노점이 있을 때의 사용료의 산출은 총액의 범위 내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5.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사용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책임질 수 없는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장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해지된 경우
2.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및 공익상 필요로 인해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용해지 신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장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요금)** 사용허가 기간동안 시장사용에 따른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과 관련하여 사고의 방지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비의 설치 및 개선을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법령이나 군수의 허가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 하거나 시장재산을 훼손하는 등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화재 예방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안에서 거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와 협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다만, 제2호의 경우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1개월 이상 휴업, 폐업 또는 사용허가를 해지하고자 할 때
2.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때
3. 시장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제16조(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실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 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군수는 제6조제1호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보상한다.

**제18조(변경금지 및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재산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달성군(군수)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제20조(판매제한)** 군수는 시장 안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사용허가 시 취급품목 외의 물품

**제21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장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행할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확립, 시장건물의 유지관리 및 시장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정 관리인을 시장 내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운영·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연체료의 징수)**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변상금의 징수)** 군수는 사용허가 없이 시장을 사용하거나 점유를 한 사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25조(상인회)** ① 사용자는 사용자들로 구성된 상인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장개축 및 관리방안의 협의
2. 청소, 방법, 노점 등 시장관리에 대한 군수의 위탁사항의 처리
3.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 불만사항의 처리

③ 제1항의 상인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시장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징수권한의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상인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하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의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제3항은 2016년 1월 1일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별표 1】

시장의 명칭과 위치

구 분	명 칭	위 치
상 설 시 장	회원시장	달성군 회원읍 비슬로512길 66 일원
	현풍백년도깨비시장	달성군 현풍면 현풍로6길 5 일원
정 기 시 장	논공시장	달성군 논공읍 금포시장길 4 일원
	구지시장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11길 15-7 일원

## 【별표 2】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

## 1.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 사용

구 분	대상	분류	기준	시 장 사 용 료
상설시장	점포	토지	연간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35
		건물	〃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25
	장옥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35
		건물	〃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25
	판매대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30
		건물	〃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15
	노점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35
		건물	〃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20
정기시장	점포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30
		건물	〃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20
	장옥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30
		건물	〃	감정평가가격의 1,000분의 20
	노점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30



## 2. 상설 및 정기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

구 분	대 상	분 류	기 준	시 장 사 용 료
상 설 시 장	장 옥	토 지	1일 3.3㎡당	1,200원
		건 물	〃	2,000원
	노 점	토 지	〃	600원
정 기 시 장	장 옥	토 지	〃	1,200원
		건 물	〃	2,000원
	노 점	토 지	〃	600원
상설 및 정기시장	이동 차량	화물차 (2t이상)	대당	2,000원
		화물차 (2t미만)	〃	1,200원
		경운기	〃	1,000원
		손수레	〃	600원

※ 상기 사용료는 3.3㎡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면적이 중간에 있을 경우  
높은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예 : 3㎡는 3.3㎡를, 4㎡는 6.6㎡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서식】

시장사용(연장) 허가 신청서				
시 장 구 분	<input type="checkbox"/> 상설시장 <input type="checkbox"/> 정기시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 용 자 (대 표 자)	법인명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성 명	①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		
시 장 명 칭			종 류	(점포, 장옥, 판매대, 기타)
상호 및 호수			허가면적	m <sup>2</sup>
사 용 기 간 (영 업 시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시부터 시까지)			
사 용 료	원		품목(업종)	
<p>「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달성군수 귀하</p>				
<p>구비서류</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1. 점포운영 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명서, 설계도면            5. 그 밖에 관계사항을 증빙할 서류         </div> <div>           2. 성실히행서약서 1부            4. 정관 1부(단체에 한함)         </div> </div>				

## 【별지 제2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시 장 사 용 허 가 증			
허 가 구 분	<input type="checkbox"/> 사용허가 <input type="checkbox"/> 연장허가		
성 명 (법 인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시 장 명 칭		종 류	(정포, 장옥, 판매대, 기타)
상호 및 호수		면 적	m <sup>2</sup>
사용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p>「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 (인)</p>			



【별지 제4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휴업, 폐업, 승계 등) 및 해지 신고서

① 시 장 명 :

② 상호 및 호수 :

③ 사용자(허가자) 주소 :

④ 사용자(허가자) 성명 :

⑤ 변 경 사 유 : (허가변경내용, 휴업, 폐업, 승계, 해지, 재산망실, 기타)

⑥ 변 경 내 용

－ 당 초 :

－ 변 경 :

⑦ 변 경 사 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8조 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시장사용료 감면신청서

① 시 장 명 :

② 상호 및 호수 :

③ 사용자 성명 :

④ 감액 신청액 :

⑤ 감 액 사 유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달성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시 장 사 용 료 반 환 신 청 서

- ① 시 장 명 :
- ② 상호 및 호수 :
- ③ 사용자 성명 :
- ④ 반환 신청액 :
- ⑤ 반 환 사 유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시장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달성군수 귀하

## 붙임 2)

## 관계법령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65조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 [전문개정 2010.6.8.]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⑥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6.8.]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2조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군·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제목개정 2013.6.12.]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같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30.>

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중소기업청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價額)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은 경우 그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10.2.4.]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7.>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를 한 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2.4.]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 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 [전문개정 2009.4.24.]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4.24.]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7.7.>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경제과)

### 3. 개정이유

-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및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100선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의 제한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  
(안 제13조제5항)

### 5.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및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100선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 법에 부합토록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에 있어 안 제13조제5항에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을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3조제3항은 삭제하였으며,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지난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5항 중 “군수는”을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  
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고”로 하고, “제한 할 수 있다”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② (생략)</p>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고-----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 붙임 3)

## 관계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11.1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개설등록및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서류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경제과)

### 3.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련조문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상인회의 등록취소 조항 삭제(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부당규제 개선)
- 나. 인정시장의 등록취소 조항 삭제(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부당규제 개선)
- 다. 조례 제명을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정비(안 제명)
- 라. 전통시장, 상인회 등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마. 상인회 설립과 등록절차 구체화(안 제3조)
- 바. 상인회 기능(안 제4조) : 관련 상위법령 추가
- 사. 보조사업 절차 및 감독과 정산(안 제6조 ~ 안 제7조) : 관련 상위법령 추가
- 아. 전통시장 인정요건 신설(안 제11조)
- 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안 제18조)
- 차.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위탁관리(안 제19조)
- 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재래시장 → 전통시장
  - 인정시장 → 전통시장

## 5.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65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2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련조문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근거없는 부당규제 개선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취소 조항 및 인정시장의 등록취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명 및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상위법과 일치하게 정비하고

안 제2조~7조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용어 정의와 상인회 설립과 등록, 상인회 기능, 보조사업에 관한 명시와

안 제18조~19조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과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지난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서를 발급한 시장을 말한다.
2.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구역 내에 있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3.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시장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2장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

**제3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에 관하여는 규칙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조(상인회 기능)**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의 수행
2. 법 제25조, 법 제26조, 법 제27조부터 제29조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의 수행
3. 그 밖의 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된 사업내용

**제5조(공동사업 경비 지원)**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 절차)** ①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20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법 제25조, 법 제26조, 법 제27조부터 제29조에 따른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상인회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용을 보조 받고자 할 때에는 상인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인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권고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감독과 정산)** ① 군수는 제5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이나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상인회에 대하여 그 지원·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상인회는 군수에게 사업집행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와 서류)**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상인회 조직에 관한 서류(회원명부, 정관 등)
2. 관할구역(시장) 배치도
3. 사업수행에 관한 서류
4. 자체 사업계획서
5.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
6. 보조금 집행내역서 및 그 증빙서류
7.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8. 그 밖의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보고)** 상인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상인회의 총회 개최 시 토의사항
2. 직접사업 수행 시 군수의 사업진행사항 요구 자료
3. 사업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현황 자료
4. 그 밖에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장 전통시장 인정기준 및 운영·관리

**제10조(전통시장 인정신청)**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통시장 인정 요건)** ① 군수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장은 점포 수 50개 이상이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인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설”, “토지” 및 “건축물의 연면적”의 뜻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을 말한다.
2. “토지”와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와 그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토지면적을 계산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부분의 면적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면적의 계산 시 제외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2조(전통시장의 관리)** ① 군수는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시장에 대하여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
2. 상인회 회원간의 의견 조정
3. 청소, 화재예방,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등 시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③ 군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법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 ① 편의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통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관리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여 상인회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와 책임)** ① 시장관리자는 해당 시장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관리자는 방화관리책임자 또는 자율소방대를 두는 등 화재진압 및 소방도로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는 상인 및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 시설 제거 등 시장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영업권의 승계)** 군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 시장 안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완료된 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의 부과 또는 지원)** ① 상인회는 전통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료 제출)**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대하여 구역을 표시한 도면, 시장의 면적, 상인명단, 점포수, 편의시설 등에 관한 현황자료를 상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군수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18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군 소유로 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 당시 해당시장의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의 시장부지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시장건물·주차장·화장실·고객센터·물류시설·비 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말한다.)
2. 전통시장의 구역 안과 밖에서 시장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상인회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구역 안과 밖에서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다만, 사도가 아닌 도로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독립된 토지안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2. 제1호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단서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는 군수와 협약으로 정한다.

**제19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설현대화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상인회·시장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입점상인 및 시장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비용의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 ① 군수 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 받은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전통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의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24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회 등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 관계법령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65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2013.5.28.>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 [전문개정 2010.6.8.]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8.]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개정 2013.6.11.>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6.11.>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③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28., 2013.6.11.>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2.4.10., 2013.6.11.>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삭제 <2013.6.11.>
3.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1.>[제목개정 2013.6.11.]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2조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12.>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②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2013.6.12.>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12.>

[제목개정 2013.6.12.]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③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 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30.>

⑤ 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중소기업청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문화체육과)

### 3. 개정이유

가. 지나친 등록규제를 완화하여 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자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며,

나. 다년간 정채되어있는 시설 사용료를 물가 수준에 맞게 적정 인상하여 문화회관 운영의 내실을 꾀하기 위함.

### 4. 주요내용

가. 조문 문구 일부 수정

(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5호, 제4조제5호 및 제6조제3호)

나. 사용료 반환사유 중 포괄적이고 재량의 남용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사용신청이 취소되었을 시에 반환가능한 조항 추가(안 제8조)

다. 다년간 정채되어 있는 시설 사용료 소폭 인상(안 별표)

### 5. 관계법령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용료 반환 규정에 있어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여 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다년간 정체되어 있는 시설 사용료를 물가 수준에 맞게 적정 인상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문화회관 시설사용료의 납부와 반환에 대하여 반환 가능 사유를 확대 명시함과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소폭 인상하여 문화회관 운영의 내실을 꾀하였으며,

○ 이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 성별/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 사항 있음

-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으면 비공개 모집을 통한 부패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할 것을 권고 받았으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충분히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유연성이 보장되므로 권고사항을 미수용함.

○ 지난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를 “문화회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92에 둔다.

제3조제5호, 제4조제6호 및 제6조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회관의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일당 10퍼센트씩 90퍼센트까지 반환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공 연 시 설	공 연 장		오 전	40,000	
			오 후	60,000	
			야 간	80,000	
	부 속 설 비	피아노	1회	40,000	
		조 명	1회	35,000	
		냉 · 난방기	2시간당	100,000	추가 1시간당 30,000
전 시 실		1일	70,000		
강 의 실		1회	30,0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오 전 - 09:00 ~ 12:00

오 후 - 12:00 ~ 18:00

야 간 - 18:00 ~ 22:00

1 일 - 09:00 ~ 22:00

※ 단,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기준의 20%를 가산함.

※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붙임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군민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 ----- 문화회관----- -----.</p>
<p><b>제2조(위치)</b> 회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627번지에 둔다.</p>	<p><b>제2조(위치)</b>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92에 둔다.</p>
<p><b>제3조(시설)</b>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p>	<p><b>제3조(시설)</b>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 --</p>
<p><b>제4조(사업내용)</b> 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5. (생략)</p> <p>6. 기타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p>	<p><b>제4조(사업내용)</b>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 -----</p>
<p><b>제6조(시설의 사용제한)</b>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기타 군수가 회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b>제6조(시설의 사용제한)</b>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 -----</p>
<p><b>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b> 회관의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득한 후 지체없이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 할 수 있다.</p>	<p><b>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b> ① 회관의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p>

현행				개정안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전액 반환																																																																																			
3. 기타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예정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일당 10퍼센트씩 90퍼센트까지 반환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				[별표]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기준</th><th>사용료(원)</th><th>비고</th></tr><tr><td rowspan="7">공연시설</td><td colspan="2" rowspan="3">공연장</td><td>오전</td><td>30,000</td><td></td></tr><tr><td>오후</td><td>50,000</td><td></td></tr><tr><td>야간</td><td>70,000</td><td></td></tr><tr><td rowspan="3">부속설비</td><td>피아노</td><td>1회</td><td>30,000</td><td></td></tr><tr><td>조명</td><td>1회</td><td>25,000</td><td></td></tr><tr><td>냉·난방기</td><td>1회</td><td>80,000</td><td></td></tr><tr><td colspan="2">전시실</td><td>1일</td><td>60,000</td><td></td></tr><tr><td colspan="2">강의실</td><td>1회</td><td>10,000</td><td></td></tr></table>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고	공연시설	공연장		오전	30,000		오후	50,000		야간	70,000		부속설비	피아노	1회	30,000		조명	1회	25,000		냉·난방기	1회	80,000		전시실		1일	60,000		강의실		1회	10,000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기준</th><th>사용료(원)</th><th>비고</th></tr><tr><td rowspan="7">공연시설</td><td colspan="2" rowspan="3">공연장</td><td>오전</td><td>40,000</td><td></td></tr><tr><td>오후</td><td>60,000</td><td></td></tr><tr><td>야간</td><td>80,000</td><td></td></tr><tr><td rowspan="3">부속설비</td><td>피아노</td><td>1회</td><td>40,000</td><td></td></tr><tr><td>조명</td><td>1회</td><td>35,000</td><td></td></tr><tr><td>냉·난방기</td><td>2시간당</td><td>100,000</td><td>추가 1시간당 30,000</td></tr><tr><td colspan="2">전시실</td><td>1일</td><td>70,000</td><td></td></tr><tr><td colspan="2">강의실</td><td>1회</td><td>30,000</td><td></td></tr></table>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고	공연시설	공연장		오전	40,000		오후	60,000		야간	80,000		부속설비	피아노	1회	40,000		조명	1회	35,000		냉·난방기	2시간당	100,000	추가 1시간당 30,000	전시실		1일	70,000		강의실		1회	30,000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고																																																																																			
공연시설	공연장		오전	30,000																																																																																			
			오후	50,000																																																																																			
			야간	70,000																																																																																			
	부속설비	피아노	1회	30,000																																																																																			
		조명	1회	25,000																																																																																			
		냉·난방기	1회	80,000																																																																																			
	전시실		1일	60,000																																																																																			
강의실		1회	10,000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고																																																																																			
공연시설	공연장		오전	40,000																																																																																			
			오후	60,000																																																																																			
			야간	80,000																																																																																			
	부속설비	피아노	1회	40,000																																																																																			
		조명	1회	35,000																																																																																			
		냉·난방기	2시간당	100,000	추가 1시간당 30,000																																																																																		
	전시실		1일	70,000																																																																																			
강의실		1회	30,000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붙임 3)

## 관계법령

###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농촌지도과)

### 3. 제정이유

- 달성군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 농업의 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농촌지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교육훈련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5. 관계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5조

##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달성군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군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농업 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과

안 제4조에는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농촌지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농업지식과 기술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은 자체예산(일부 시비)을 반영하며,

○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 “원안동의”이며,

○ 지난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의 검토결과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회, 품목농업인연구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농업관련단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관련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업경영인회)를 말한다.
4. “소비자”란 농산물·농산가공품 등을 구입·소비하거나 여가 생활·활동을 위하여 농촌생활자원 분야를 이용·체험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촌생활자원 분야”란 농촌의 의·식(농산물가공 포함)·주 관련 분야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
6.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산물 생산기능 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말한다.
7. “농촌지도사업”이란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역량개발교육·훈련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등을 포함하여 달성군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지도사업)**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작목에 대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이에 따른 성과의 전파 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3. 새기술 실증시험 지역 적응사업
4. 농촌자원의 발굴 및 육성사업
5.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 지원 사업
6.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관련단체 육성 및 활동(대회, 행사, 농업인의 날 등) 지원 사업
7.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지원 사업
8. 도·농상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소비자 교육 및 지원 사업
9. 종자·종묘·종균·미생물 등 보급사업
10.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참달성”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훈련사업)** 군수는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원에 대한 교육·훈련
2. 농업인 및 농업인과 관련된 단체원 등에 대한 해외교육·훈련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주요내용 :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각종 사업

※ “비용 추계결과” 각 항목 참조

2. 비용발생 요인 : 사업비(보조금)

3. 관련조문 : 농촌진흥법 제16조, 제25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수요를 2015년 수준으로 봄

나. 추계 결과 : 합계 연 2,000백만원 정도

○ 주요 작목에 대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이에 따른 성과의 전파사업 : 연 700백만원 정도

○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 연 700백만원 정도

○ 새기술 실증시험 지역 적응사업 : 연 50백만원 정도

○ 농촌자원의 발굴 및 육성사업 : 연 50백만원 정도

○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관련단체 육성 및 활동(대회, 행사, 농업인의 날 등) 지원 사업 : 연 70백만원 정도

○ 종자·종묘·종균·미생물 등 보급사업 : 연 150백만원 정도

○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참달성”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지원 사업 : 연 280백만원 정도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국·시비 일부보조)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지

6. 작성자 : 농촌지도과 지도기획팀 조현정

[별 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농촌진흥 사업지원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군비		1,960,000	1,960,000	1,960,000	1,960,000	1,960,000	9,800,00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 붙임 2)

## 관계법령

## □ 「농촌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라.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사. 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나.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다.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라.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달성군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 출 일 : 2015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보건과)

3. 의회 의견 청취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달성군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4.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 달성군 현풍면 하리 253-2번지 일원
- 면 적 :  $A = 4,798\text{m}^2$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현1	달성군 보건소	공공 청사	달성군 현풍면 하리 253-2번지 일원	-	증) 4,798	4,798	-

## 다. 추진경위

- 달성군 현풍면 하리 253-2번지 일원으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여 보건소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주민들에게 향상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라.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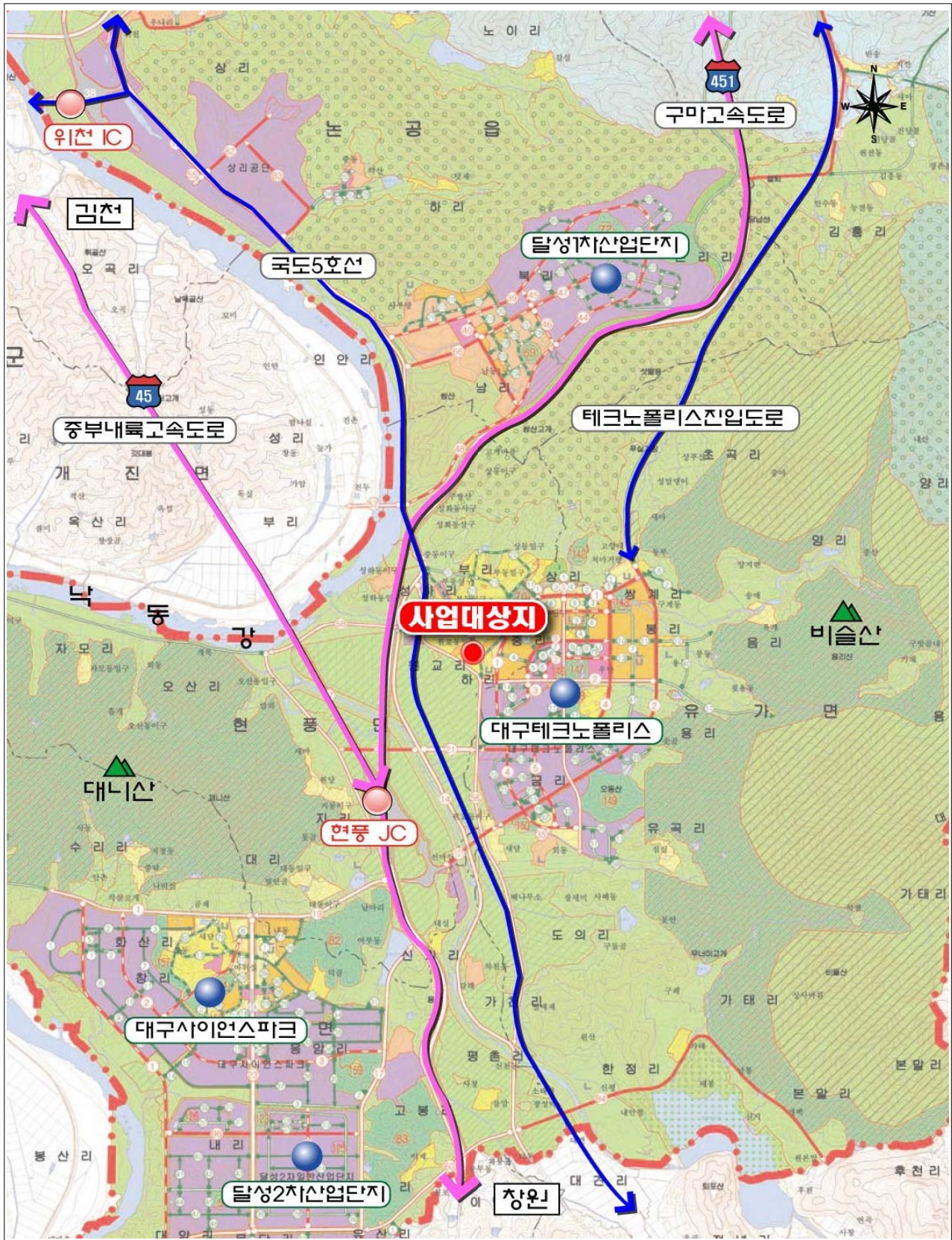
- 2014. 7. : 달성군 보건소 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2015. 9. :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 2015. 9. 14 ~ 10. 5 : 주민 의견청취(국·공휴일 제외 14일간)

## 마. 향후계획

- 2015. 11. :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5.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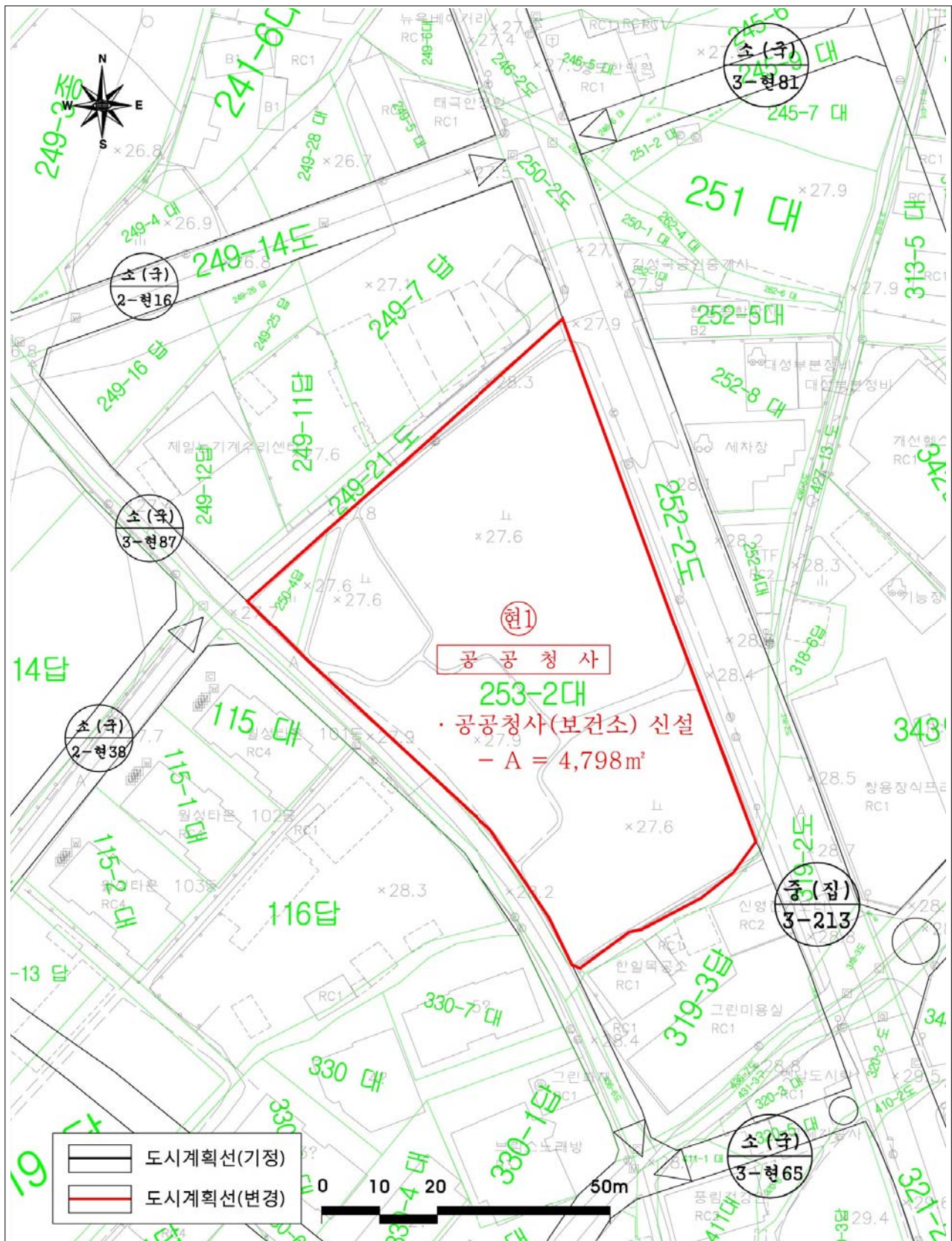


# 위 치 도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 Ⅱ. 검토의견

달성군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현재 운영중인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93-1번지(2,182㎡) 소재의 보건소를 달성군 현풍면 하리 253-2번지 일원으로 신축하여 이전을 하면 늘어나는 보건소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주민들에게 향상된 의료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새로이 신설되는 공공청사 면적은 4,798㎡이고 현재 제2종일반 주거지역으로써 군유지가 4,67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달성군 현풍면 하리 253-2번지 일원으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여 보건소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주민들에게 향상된 의료혜택을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